

중동의 위기

4~5, 7면

정성진 칼럼

- 세계 경제 위기

7면



마이크 데이비스가 말하는
카트리나 참사 1년

5면

민주노동당 논쟁

- 중소기업가 문제

3면

한미FTA와 약값 인상

8면

10호 2006년 9월 2일

국제적 관점 | 분명한 주장 | 회피하지 않는 자세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

값 600원



레바논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반전 운동을 분열시킬 수도 있는 주장이 집권당 국회의원에 의해 개진됐다. 열린우리당 의원 최재천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친미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라크 파병과 달리 이번 PKO(평화유지군)는 아랍 국가도 다수 참가하기 때문에 아랍권 전체에서 우리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제 눈에 물대기 식 해석일 뿐이다. 첫째, 유엔군 레바논 파병은 이스라엘 정부와 부시가 요구하고 있다. 헤즈볼라와 레바논인들의 저항에 호되게 당한 이스라엘 정부는 레바논 남부에 평화유지군이 주둔함으로써 이스라엘 군대가 수행하지 못한 임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

미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고 유엔군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점령 때문에 지상군이 부족하다. 지난달에는 바그다드로 5천 명의 병력을 증파하기도 했다.

게다가 미군이 직접 투입될 경우 거대한 저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시는 이탈리아 같은 미국의 주요 동맹들이 이스라엘을 도와 그 지역을 통제해 주길 바란다.

프랑스는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제국주의적 동기에서 참전하기는 마찬가지다. 프랑스는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미국에 밀려났던 중동 지역에 다시 교두보를 마련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자신의 옛 식민지였던 레바논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처럼 유엔군의 레바논 투입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과 마찬가지로 소(小)제국주의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레바논 파병을 추진하려 한다. 정부 자신의 말을 빌면 “평화유지군에 상당한 재정기여를 하고 있긴 하지만 파병 규모 면에서는 기여도가 낮은 만큼 유엔 사무총장 후보까지 배출한 한국의 위상”에 맞게 파병하겠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경쟁으로 레바논 남부 파병이 속도가 붙은 만큼 한국 정부의 파병 계획도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모두 점령 상태다. 부시가 “의지의 연합”이라고 부른 연합군이든 유엔군 군복을 입은 유럽 주도 군대이든 점령군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반전 운동은 이라크에서 레바논까지 모든 점령의 종식을 위해, 자이툰 부대 철수에서 레바논 파병 반대까지 노무현·열우당 정부의 모든 참전 정책을 반대하며 일관되게 싸워야 한다.

8월 26일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열린 한국군 레바논 파병 반대 첫 시위는 9월 23일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시위에서 한층 확대돼야 한다. 대학에서, 거리에서, 작업장에서, 지역사회에서 9월 23일 시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자!

김광일



이라크 점령 종식/ 한국군 레바논 파병 반대/ 이란 공격 반대/ 평택 미군 기지 확장 반대

9.23

자이툰 연내 완전 철군을 위한 반전행동

9월 23일(토) 오후 3시 / 서울역 광장/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www.antiwar.or.kr



인용해도 될까요?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반테러 정책은 엄청난 민간인 희생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지난 1970년대 중남미 지역 독재 정권의 행태와 유사하다. … 레바논 사태는 이라크 전쟁에 이어 또 한번 실수를 저지른 것”

— 한때 네오콘이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

“선거 때 일본 극우파가 독도 해상에 배라도 한 척 띄운다거나 미군 병사가 또 무슨 사고라도 쳐 준다면, 3기 좌파 정권 출현은 95퍼센트 확실할 것이다.”

— 여전히 불안한 류근일

“지금 세상은 마치 대통령 씹기 전(全) 국민 운동이 벌어진 것처럼 보인다.”

— 명계남

“북한의 핵무기에 대비해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핵무장까지 고려해야 한다.”

— 한나라당 토론회에서 한림대 교수 구분학

“그놈이 죽일 놈인가. 노무현이가 그게 어디 대통령입니까. 전국 어디를 가도 노무현 대통령 욕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 하중근 열사의 형님 하철근 씨

“원·하청연대회의의 할 때 솔직히 사측과 교섭을 하는 것 같아요. 파업 투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할까. 이를 얘기해야 하는데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어떻게 하든 우리의 파업 수위를 낮추려고 해요.”

—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김영성 지회장

“아이 개새끼야 … 씨발놈아. 우성조합원도 내가 차근차근 찢아낼거야. 내가 지부장은 그만뒀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있어.”

— 연대는커녕 비정규직 활동가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해고 협박을 한 기아차노조 전 화성지부장 정상재

8월 22일 태국경찰에 의해 체포된 탈북자들

모든 탈북자들의 이주 자유를 보장하라

최근 태국·버마·라오스·베트남 등지로 탈출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동남아 국가의 미국 대사관·영사관 진입이 더 수월할 거라는 탈북자들의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길은 매우 위험하다. 국경 지대에는 지뢰밭이 널려 있다. 매공강을 건너다 악어에 잡아먹히기도 한다. 더구나 이 나라들에서도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태국 경찰은 탈북자 1백75명을 체포했다. 태국 정부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제3국으로 추방”한다고는 하지만, 탈북자들을 불법화하기는 중국과 마찬가지다.

선별심사

이들을 둘러싼 ‘국제정치’는 위선적이고 냉혹하다. 이번에 미국은 탈북자들을 걱정하는 척 “미국 공관에 접근하면 위험”하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이용하라”고 설 명해 줬다. 최근 탈북자들이 잇따라 미국 대사관·영사관에 진입해 늘어난 정치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미국 대사관·영사관으로 진입한 탈북자들을 내치기는 부담스럽지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로 접근한 탈북자들은 ‘선별심사’가 쉬워진다.

미국은 정치적 이용가치가 있는 한에서만 탈북자들을 받아들였다. 지금껏 미국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진 탈북자들은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다.

미국은 탈북자들이 “정식으로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을 중국에 넘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난민 문제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유엔은 ‘경제적 난민’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사 ‘정치적 난민’의 경우라도 대량의 난민 사태에 대해서는 냉정하기 이를 데 없다. 지난해 12월 이집트 경찰은 수단 내전을 피해 들어온 수단 난민들을 학살했다. 수천 명의 수단 난민들은 학살이 벌어지기 한 달 전부터 카이로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앞에서 이집트에 정착시켜 주거나 제3국으로 보내 달라고 애원했지만 유엔의 대답은 냉혹했다. 유엔은 수단 난민들을 “비현실적” “기회주의자”로 비난해 이집트 경찰의 학살에 청신호를 보냈다.

한편, 태국에서 탈북자들이 체포된 바로 그 날 한나라당 정형근은 “탈북자들 속에 간첩이 많다”며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 이런 편견은 탈북자 차별을 강화한다.

진정한 진보주의자라면 이런 냉대와 차별에 맞서 탈북자들의 조건 없는 이주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한규한

장하성펀드의 진정한 성격

고려대 교수이자 참여연대 소속인 장하성 씨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내세우며 펀드를 조성해 태광그룹의 한 계열사에 대한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기업주를 귀찮게 하느냐’며 우파 언론이 시비를 거는가 하면,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는 전기”(〈한겨레〉) 이길 바란다는 지지도 만만찮다.

그러나 장하성펀드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도는 외관과 달리 별로 진보적 의미가 없다.

다른 사모펀드(투기자본)와 마찬가지로 ‘장하성펀드’는 수익률 극대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세금 회피를 위해 조세 피난처인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으며, 외국투자자들이 자금을 댔다. 펀드 운용도 ‘먹튀’로 악명 높은 소버린의 투자 자문을 맡았던 자들이 담당한다.

소버린

지배구조 개선은 투기 자본들이 흔히 내세우는 명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하성펀드의 재벌 지배구조 개선 시도(‘주주행동주의’)는 재벌의 이익을 크게 거스르는 것도 아니다. 장하성펀드가 지분 매입한 지 단 며칠 만에 대주주인 태광은 벌써 1천 4백억 원의 이익을 봤다.

‘주주행동주의’는 주주의 투자수익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노동자적이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론자들의 말대로라면 비용을 줄이고 배당을 최대한 늘리는 기업이야말로 좋은 지배구조다. 이 때 비용 절감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감원과 비정규직 늘리기다. KT&G에 개입한 사모펀드는 주주 이익을 위해 대량 감원을 하라고 요구해서, 주가를 올린 후 되팔아 한몫 잡기도 했다.

장하성펀드도 태광그룹의 악명 높은 노동자 탄압만큼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펀드에 돈을 낸 투자자들의 수익률 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에게도 기업 정보와 결정 기회가 공유되는 기업 구조를 추구해 왔다. 장하성펀드의 출현은 그 운동이 애초부터 완전히 잘못된 길을 대안으로 삼았음을 보여 준다.

정중남

용산미군기지터 개발 계획을 철회하라

노무현 정부는 지난 7월 용산공원 특별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 용산에 있는 미군기지터의 상당 부분을 주상복합이나 고층주거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개발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물론 여러 시민 단체들과 심지어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장 오세훈까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노무현이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서 “자주와 평화의 대한민국” 운운하는 것이나, 서울에 50개가 넘는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는 오세훈이 갑자기 생태주의자라도 되는 양 나서는 것이나 위선적이긴 마찬가지다.

여기저기서 반발이 일자 노무현 정부는 최근 지자체의 미군부지 매입 국고지원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는 시행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차하면 용산 공원에 부산 하야

리아 기지처럼 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넘겨 버릴 테니 알아서 해보라는 식이다.

이처럼 정부는 수조 원에 달하는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며 협박하고 있지만, 애당초 미군기지 이전 비용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름 아닌 노무현 정부다.

평택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짓밟으며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한 당사자가 이제 와서 그 비용을 들먹이며 평

깡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계획과 비용 부담 문제가 불가피함을 전제한 채 국채발행이나 국민신탁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용산미군기지터를 개발해 그 돈으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대겠다는 정부의 계획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 평택땅을 내주고 이전 비용까지 다 대주면서 ‘자주’를 들먹이는 노무현의 위선을 못본 척 보아넘기지 말아야 한다.

미군에게 이전 비용을 대줄 게 아니라, 오염시킨 땅의 원상회복 비용을 받아내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해야 한다.

장호중

민주노동당

중소기업 육성론이라는 포퓰리즘을 넘어서야

민주노동당은 7월에 열린 중앙위원회와 임시 당대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을 당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주노동당을 상징하는 정책은 부유세·무상의료·무상교육 같은 분배 정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26 재선거와 올해 5·31 지방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자 당은 친경제 성장 정책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8월 23일 중앙당에서 열린 '상설연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영욱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도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중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성현 대표도 5·31 지방선거 직후 이렇게 말했다. "부유세, 무상의료·무상교육은 다 아는 거고 실통치도 않다.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뭔가가 대단히 미약했다." 즉, "중소·영세상인, 중소기업인의 민주노동당 지지 동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선거 패배의 핵심"이다(〈레디앙〉 6월 14일치).

김창현 전 사무총장은 당 강령에 민주노동당을 "중소상공인의 정당"이라고 못박고 있다고까지 말했다.(이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당 강령에는 그런 구절이 없다.) 그는 중소기업인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선거에서 당선할 수 없으므로 "중소상공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조직하고 당의 중요 사업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각

이 주장들은 모두 커다란 착각에 근거해 있다. 민주노동당이 아직도 노동계급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소기업인이 개별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당의 원칙과 규율을 따르고자 한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중소상공인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정확히 당의 노동계급 이익 옹호와 충돌을 빚을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론'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분배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가정을 깔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전통적 정책인 분배를 통한 성장이 지배자들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자 위험한 우회로 —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 를 택한 것이다.

예컨대, 5·31 지방선거 때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성진 최고위원은 선거 기

현대차노조 파업을 비난하는 울산기업사랑실천범시민협의회 인사들 — 민주노동당이 왜 이들과 협력해야 하는가

간 내내 "파이를 키우는 방법"에 골몰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부지를 "중소·향토기업에게 제공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장석준 동지를 포함해 적지 않은 당 간부들이 주장하는 대기업노조 양보론도 경제 위기의 시기에는 대중 투쟁을 통한 노동자 몫 늘리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짙은 회의가 깔려 있다. 요컨대, 대중 투쟁에 대한 확신 없음의 반영인 셈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급속노조는 대기업노조 양보론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자료를 내놓았다. 중소기업 규모 제조업체 노조들이 주축인 급속노조가 8월 11일 임금 협상을 완료한 36개 작업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 7만 1천7백47원이 인상됐다. 현대차노조가 올해 인상한 기본급 7만 6백65원과 엇비슷한 인상액이다.

이것은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인하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 준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조직화 정도와 투쟁 의지이다.

'중소기업 육성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같다. "우리 나라의 중소 기업들은 대다수 재벌 대기업에 하청으로 묶여 있

으며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로 고통 겪고 있다. ... 부도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에게 노동자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해 주고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할 수 없기 마련이다. 그야말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체적 현실 개선을 위해서도 중소기업 지원과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김창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린다는 것은 얼마간 사실이다. 그러나 둘 간의 "불공정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동시에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하청 중소기업이 원청 대기업의 단가 인하 등 때문에 이윤의 일부를 수탈당할지라도 하청분업 구조를 통한 대기업의 지원 등으로 전체 수익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산업과 섬유산업을 대상으로 이윤율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하청의존도가 높은 [중소] 기업일수록 이윤율이 높다."

요컨대, "불평등한 하도급 관계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일부 산업에서는 타당하지만 전체 중소기업 차원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황선웅, '제조업 기업규모간

양극화의 실체와 원인',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산업의 실태》, 새세상을 여는 진보정치연구소)

파이

대기업(67.2퍼센트)만이 아니라 대다수 중소기업(65.2퍼센트)들이 한미FTA를 찬성한 것이나(대한상공회의소 조사), 현대차 부품업체 사장 등 울산 중소기업인들이 주축이 된 '기업사랑실천범시민협의회'가 현대차노조의 파업을 비난한 것은 둘 사이의 관계가 불공평하면서도 상호협력적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동조건 격차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

"기업규모간 경영 성과의 격차 확대 현상은 그다지 뚜렷이 관찰되지 않는 데 비해 노동조건 양극화 현상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확연히 나타났고, 최근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황선웅, 위의 글)

사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바다에서 쟁기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빈곤 완화는 대기업도 하지 못한 일을 그보다 훨씬 열악한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육성론'의 실천적 함의야말로 진정한 문제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계급 협력과 화해를 해야 한다는 믿음은 노동자 운동에 해악적이다.

지방선거 때 김성진 인천시장 후보는 TV 토론에서 "기업주와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변했다. "시장은 중립적인 존재이므로 어느 편도 들 수 없다. ... [노동자와 기업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을 조율하겠다."

투쟁하는 양대 계급 사이에서 공평무사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말리는 구실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조직 노동자를 넘어 미조직 노동자들의 광범한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민주노동당의 핵심 당면 과제를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보다는 그 기업주의 이익 대변에 더 열심이라면, 민주노동당의 노동계급 기반 확대 작업은 요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인식



〈맞불〉 창간을 축하합니다

허영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동 부위원장)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하중근 열사. 단일 사건으로 7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구속됐다. 노동자·민중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자본과 자본 독재 권력은 이제 노동운동을 초토화시키려 한다. 체제내화를 넘어

안락사를 시도하고 있다. 신자본(유)주의는 침략과 약탈의 괴물이다. 반전·반자본 운동의 헛불처럼 당당히 '맞불'을 놓아야 한다. 큰 불은 물로는 끌 수 없다. 〈맞불〉로 맞서야 한다. 그것도 당당히 맞서야 한다.

추천 소책자



한미FTA에 맞선 투쟁과 대안

이정구 외 지음
3,000원

카트리나참사 1년 유령의 도시가 된 뉴올리언스

마이크 데이비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회주의자로 계급, 도시화, 환경 등의 문제를 다룬 글과 책을 여럿 저술했다. 미국 노동운동을 다룬 명저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창작과비평사)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도시 환경 문제를 다룬 논문 “슬럼투성이 지구”(《참비》2004년)도 번역돼 있다. 최근에는 《몬스터까지 온 괴물 : 조류독감이라는 전 세계적 위협》(The Monster at Our Door: The Global Threat of Avian Flu)과 《빈민가 행성》(Planet of Slums)을 출판했다.

아직까지도 방치돼 있는 흑인 거주지

뉴올리언스는 아직도 패허 상태다. 주로 백인들이 거주하는 강변의 ‘아름다운 지구’는 다시 ‘호시절’을 누리고 있지만, 흑인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이 거주하는 도시는 아직도 유령의 도시다.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전기가 안 들어오고(연방 정부의 지원 부족 때문에 현지 전기회사가 파산했다), 위험한 돌무더기 속에서는 아직도 시체들이 발견된다.

한편, 주민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루이지애나 주민(州民) 25만 명이 텍사스 주에 머물고 있다.(그들의 80퍼센트 이상이 흑인이다.) 또 다른 10만 명이 애틀랜타(조지아 주의 주도)에 머물고 있다.

뉴올리언스와 그 인근 지역의 집주인들은 놀랍게도 연방 재건기금을 한 톨도 받지 못했다. 수재(水災) 보험에 가입한 극소수 집주인들만이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다. 물론 세입자들(카트리나 재앙이 닥치기 전에 세입자들은 대부분 흑인이었다)도 땀 한 톨 못 받았다. 부시 정부는 뉴올리언스의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공영주택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손상당하지 않거나 쉽게 고칠 수 있는 주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말이다.

헤즈볼라

며칠 전에 나는 루이지애나 주에 사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 우리는 뉴올리언스에 헤즈볼라를 초대해야 할 것 같다.” 그 시아파 운동이 레바논 남부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관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재건 사업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뉴욕 타임스)에서 읽고 한 말이었다.

한편, 쓰나미로 폐허가 된 스리랑카와 몇몇 나라에서 온 방문단이 뉴올리언스와 인근의 세인트버나드 군을 둘러보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질려버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쓰나미 피해를 입은 인도양 연안의 재난 수습 작업이 미국보다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이다.

얼마 전 미국 케이블 TV에서 방영된 스파이크 리의 4시간짜리 다큐멘터리 〈독이 무너졌을 때〉는, 비록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지역의 핵심 활동가들과 인터뷰도 하지 못했고 최근에 벌어진 여러 차례 거리 시위 장면도 담지 못했지만, 미군 공병대의 범죄적 태만을 날마다 고발하는 강력한 기소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큐멘터리는 (카트리나의 파괴력이 아니라) 공병대가 일렁퐁퐁 지어놓은 독 때문에 도시의 대부분 지역이 물에 잠겼음을 잘 보여 준다. 의회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방식으로 스파이크 리는 뉴올리언스의 평범한 블루칼라 노동자들 — 흑인이든 백인이든 — 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한다. 그래서 숭고하기도 하고 가슴아프기도 한 그들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 준다.

한편, 인종 청소도 진행중이다. 이제 뉴올리언스

는 백인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도시가 돼 버렸다. 전에 루이지애나 주의 세력 균형자 구실을 했던 적어도 10만 명의 흑인 유권자들이 거의 영구적으로 사라졌고, 이 때문에 공화당이 유리해졌다. 물레인에서 프렌치쿼터에 이르는 백인 거주지 ‘아름다운 지구’의 부동산 자산 가치가 치솟고 있다. 심중팔구 점점 더 많은 흑인들이 머지않아 학교 부족이나 셋집 부족 때문에 그 곳을 떠나야 할 것이다. 사악한 건축업자들에 이끌려 뉴올리언스로 온 라틴계 이민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동차를 짐 삼아 살고 있는데, 이제 그들의 노동이 더는 필요 없어져 이민자 단속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체포되고 있다.

스파이크 리의 다큐멘터리가 감동적으로 보여준 도시의 분노는 여전히 강렬하지만, 멕시코만 연안의 운명은 이제 아주 하찮은 국가적 관심사일 뿐이다. 민주당이 뉴올리언스를 배신한 정도는 부시 정부와 다르지 않고, 위선적인 태도는 오히려 한술 더 뜬다. 힐러리 클린턴과 그 일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할 권리를 옹호하느라 너무 바빠서 루이지애나의 빈민과 흑인 들을 위해 악어의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없다.

나는 흑인의원단이 대중의 진정한 분노를 동원하는 일에 얼마나 열의가 없었는지, 노동운동이 미국 현대사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가장 지독한 공격 가운데 하나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는지 알게 됐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일부 예외적인 노조 지도자나 흑인 민주당원 들도 있었지만, 뉴올리언스와의 진정한 연대를 책임진 사람들은 에이콘(Acorn)(저소득층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단체), 커먼그라운드(Common Ground)(광범한 대안적 좌파나 반전 운동 출신 인사들), 흑인민족주의와 아프리카중심주의 단체들의 연합, 경험많은 공민권 활동가들, 옛 흑표범당 출신 인사들이었다.

지난 4월 나는 〈네이션〉지에 다음과 같이 썼는데, 슬프게도 내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최근에 벌어진 이 뉴올리언스의 전투에서 새로운 또는 부활한 공민권 운동의 산물(産物)을 보는 것은 고무적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 이른바 진보적 민주당원들, 심지어 흑인의원단의 의미 있는 연대에 의한 단호한 지역적 행동주의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저런 약속과 성명서 발표, 대표단 파견은 이따금 진행된다. 그러나 뉴올리언스의 살인 미수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위기의식이 투표권법 제정 40주년 기념식에 반드시 표현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역사가 테드 터널이 지적했듯이, 1874년에 북부 급진주의자들이 뉴올리언스 백인들의 반란에 맞서 전투적인 무장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것이 남북전쟁 이후 ‘재건’(Reconstruction)의 실패에 일조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우리의 미약한 대응이 이제 새로운 ‘재건’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을까?”

조너선 쿡

조너선 쿡은 영국 출신 프랜차이즈 기지로 이스라엘의 나자렛에 거주하며 〈가디언〉·〈옵저버〉·〈일렉트릭〉·〈지프나이트〉 등에 기고하고, 《피와 종교: 유대인의 민주주의 국가를 폭로한다》(Blood and Religion: The Unmasking of the Jewish and Democratic State)라는 책을 썼다. 그의 웹사이트는 www.jkcook.net이다. 아래 글의 전문은 〈맛불〉 웹사이트 www.counterfire.or.kr에 실려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수치스럽게 패배했다고 해서, 끊임없는 군국주의에 대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의 무적 신화를 재확인시키고, 국내 여론의 초점을 자국의 군사적 패배에서 딴 데로 돌리고, 이스라엘군이 계속 유용함을 판대한 후원자 미국에게 입증하기 위해 더 강력한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려 한다.

이스라엘군이 떠나더라도 레바논 남부는 다시 전쟁 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거의 날마다 이스라엘 전투기와 무인정찰기가 레바논 영공을 침범하고, 헤즈볼라를 “억제하기” 위해 공습을 퍼붓고,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암살 작전이 빈번하게 벌어질 것이다. 똑같은 전투기와 정찰기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의 대통령궁 상공을 더 많이 날아다니고, 망명중인 하마스 지도자 칼레드 메살을 암살하려는 활동이 더 많아지고, 시리아의 헤즈볼라 “보급선”을 공격하는 일도 더 많아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 핵무장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란에게 묵시록을 연상시키는 경고를 보내는 일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방에서 지상과 공중 공격들을 더 많이 할 것이고, 따라서 팔레스

‘휴전’ 발효 뒤 신속히 재건 활동에 나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은 곳에 세운 배너 — ‘Made in USA(미국의 작품)’라고 쓰여 있다.

타인인 사상자도 늘어날 것이다.

레바논에서 벌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할 계획이 없다. 이스라엘은 평화협상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다가는 점령지를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되돌려주는 적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그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미국 군수업체들이 좋아하는 공중 폭격 같은 형태의 비대칭적 전쟁을 더 많이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주말(8월 19일)의 사태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예상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먼저 유엔 휴전결의안을 위반했다. 이

سرائيل 특수부대가 레바논 북동부 바알베크 근처의 도로와 다리 등을 공습하며 헤즈볼라 진지를 공격했다. 이 중대한 휴전 위반에 대해 약간의 비난만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유엔의 테르제 뤼드-라르센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환영받지 못할 사태 전개”이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휴전 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레바논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자신들의 관할 지역 밖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논쟁을 거부했다.

속임수

사실, 이것은 정보 수집 임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이스라엘군 특수부대는 이스라엘이 말하는 ‘완충지대’의 북쪽 경계선인 라타나 강 너머에서 헤즈볼라 지도자 셰이크 무하마드 야즈바크를 체포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감행했다. 그 암살부대는 아랍인들로 위장 — ‘미스타르빔’이라는 이스라엘 부대가 흔히 하는 짓 — 했을 뿐 아니라 레바논 병사들로도 위장한 채 레바논군 차량을 운전했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자 헤즈볼라가 총을 쏘기 시작했다. 격렬한 총격전 끝에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이스라엘군이 사용하는 오웰 식 어법 — 이스라엘군의 공식 명칭은 가당치도 않게 ‘이스라엘방어군’(Israel Defence Forces)이다 — 이 아니라면 이 작전을 어떻게 “방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휴전의 법률적 토대인 유엔 결의안 1701호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공격적 군사 작전” 중단을 요구한다. 이 군사 작전이아랍로 공격적인 것 아닌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엔의 휴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침략한 ‘완충지대’ 밖에 있는 헤즈볼라 진지를 공격할 뿐 아니라 그 공격에 레바논 군대도 연루시키는 방식으로 휴전을 위반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는가? 이제 헤즈볼라 전사들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군으로 위장한 것 아닌가 의심하면서 레바논군을 향해 총을 쏠 수도 있지 않을까? 결의안 1701호에 따라 이스라엘을 대신 해 레바논군이 레바논 남부를 통제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속임수는 레바논군의 입지를 더한층 악화시키지 않을까? 따라서 레바논군이 헤즈볼라와 교전하기를 꺼리는 것을 핑계로 이스라엘이 적대 행위를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다시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 — 이

미 그 지역에 있는 레바논 병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착하는 — 으로 위장한 채 작전을 전개한다면 과연 무슨 말이 나올까? 이런 질문들에 시급히 대답해야 하지만, 늘 그렇듯이 외교관들이나 언론은 이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은 또 다른 ‘기습’을 감행했다. 이번에는 요르단강 서안지방의 라말라였다. 그 곳에서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정부를 시급히 대답해야 하지만, 늘 그렇듯이 외교관들이나 언론은 이런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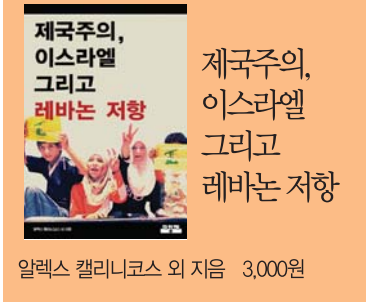
외교 전선에서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 단 길러만은 아랍연맹의 평화 제안을 즉시 거부했다. 아랍연맹이 다음 달(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려 하는 그 제안은 2002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 아랍 각국이 제기한 포괄적 평화안 — 그 때도 이스라엘은 이를 간단히 무시했다 — 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길러만은 새 평화안이 쓸모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원하거나 그 공격에 레바논 군대도 연루시키는 방식으로 휴전을 위반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는가? 이제 헤즈볼라 전사들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군으로 위장한 것 아닌가 의심하면서 레바논군을 향해 총을 쏠 수도 있지 않을까? 결의안 1701호에 따라 이스라엘을 대신 해 레바논군이 레바논 남부를 통제하도록 돼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속임수는 레바논군의 입지를 더한층 악화시키지 않을까? 따라서 레바논군이 헤즈볼라와 교전하기를 꺼리는 것을 핑계로 이스라엘이 적대 행위를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다시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 — 이

재앙

이스라엘의 이 모든 ‘방어’ 행동을 보며 우리가 얻은 결론은 무엇인가? 그 답은 바야흐로 더 많은 전쟁과 학살이 벌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이다. 그런 전쟁과 학살의 대상이 팔레스타인인들이든 레바논이든 시리아든 이란이든 또는 그들 전부이든 말이다. 지난 토요일 이란군 사령관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처지에서 볼 때 이것은 심중팔구 현명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 관리들이 주말(8월 19일)에 시사했듯이, 유엔 안보리가 곧 이란 제재 방안을 채택할 것이고 그 안에는 이란바 이란의 핵아망을 좌절시킬 군사력 사용도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 나온 소책자



제국주의, 이스라엘 그리고 레바논 저항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동자와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전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위력을 더해가는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김우용(기아차 노조원 / 정규직)

지난 8월 25일 기아차·현대차·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들의 역사적인 연대 파업이 성공적으로 벌어졌다. 특히 현대차 울산·전주·아산 공장과 기아차 화성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시에 2~4시간 파업을 벌였다.

이 때문에 이들 공장의 생산은 대부분 중단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없이는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정규직 노조의 6시간 파업과 비정규직 노조의 8시간 파업으로 전 공장이 하루 종일 중단됐다.

대체인력 투입을 방관해 온 남택규 집행부는 현장에서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원청 관리자들과 정규직 조합원

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은 막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25일 정규직 노조의 양재동 본사 항의 집회에 함께하겠다는 비정규직 지회의 제안은 군색한 이유를

■기아차 식당 여성 조합원들, 아자!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은 벌써 1천2백여 명을 넘어섰다. 얼마 전 식당 노동자들이 지회에 가입하자 기아 경영진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식당 노동자들이 파업해서 배식이 끊기면 모든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식당 노동자들은 뜨거운 국에 두 다리가 익어 빠가 보이고, 무커터에 손가락이 잘리고, 2백 킬로그램이 넘는 감자를 손으로 까는 등 끔찍한 노동조건에서 일했다.

끔찍한 고통만큼 분노도 대단하다. 이들은 언제든지 파업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따라서 남택규 정규직 집행

부는 식당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파업권을 옹호하고 연대에 나서야 한다. 계속 식당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약하려한다면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힐 것이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해 온 정규직 선봉대와 현장 투사들은 식당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수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 24일부터 좌파적 현장 조직들이 공동으로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동투쟁에 나선 만큼 조금의 차이를 극복하고 집행부가 방관하면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각오로 비정규직

대며 거부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지회는 본사 항의 집회에 50여 명 가까이 참가해 연대를 나타냈다.

아쉽게도, 남택규 집행부는 비정규직 지회에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다.

또한 나의 원직복직 투쟁과 비정규직 지회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정규직 선봉대가 만들어진 팻말 구호를 문제 삼으며 팻말을 들지 말라고 요구해, 항의를 사기도 했다.

현재 남택규 위원장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별을 분쇄하겠다는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끔찍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 투쟁을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한 면피 행위로 비쳐질 수도 있다.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화성공장에는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 6명이 가운데 필자인 김우용 동지 자신도 포함돼 있다. 그는 2년 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원직복직을 위한 천막농성을 8월 16일부터 계속하고 있다. — 편집자

과 비정규직 8명이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고소당한 정규직 중 선봉대원이 5명, 대의원이 1명이다.

이들 중에 5명이 현장조직인 ‘노동자의 길’ 회원이다.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노동자의 길’ 회원들의 모습은 모든 정규직 활동가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 지역 사회포럼

중부지역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8월 31일(목) 오후 8시
장소: 명동향린교회(명동성당 앞 골목)
연사: 정성진(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647-3309

동부지역

제국주의, 전쟁 그리고 저항

9월 19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동부여성플라자 (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8-330-4624

■ 대학 맑스주의 포럼

서울지역 참가비: 1천 원 / 문의: 010-2752-2003

중동의 위기와 미국의 세계제패전략

북부

9월 7일(목) 저녁 6시30분
장소: 고려대 서관(문과대) 317호

동부

9월 7일(목) 저녁 6시 30분
장소: 경희대 문과대 401호

서부

남부

9월 20일(수) 저녁 6시 30분
장소: 성공회대 새천년관 7208호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테러와의 전쟁’

강원지역

9월 14일(목) 저녁 7시
장소: 강원대(강의실 추후 공지)
문의: 011-9270-8327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시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맞불〉을 정기 구독하십시오



짚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짚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계좌 번호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인터넷에서도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ounterfire.or.kr>

최근 미국 경제는 5년 만에 다시 불황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발표된 2/4분기 미국 경제 지표는 명백한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회(중앙은행) 의장 버냉키는 지난 8월 8일로 예상됐던 연방기금 금리 추가 인상을 하지 않았다. 크루그먼, 루비니, 로우치 등 세계의 유수한 경제 예측 전문가들은 2006년 말 또는 2007년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불황을 점치고 있다.

그럼에도 뒤메닐, 레비, 패니치, 진딘, 글린, 샤이크, 페트라스 등 상당수 저명한 좌파 이론가들은 세계 경제가 지난 1970년대 이후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또한, 오늘날 좌파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좌파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위기론을 되풀이해 온 것 때문이라고도 한다.

이들 구조적 위기 종식론자들은 대체로 1980~82년을 경계로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에서 이윤율이 상승 추세로 반전됐다는 ‘사실’을 주된 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에 제시된 필자의 이윤율 계산 결과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 준다.

순환적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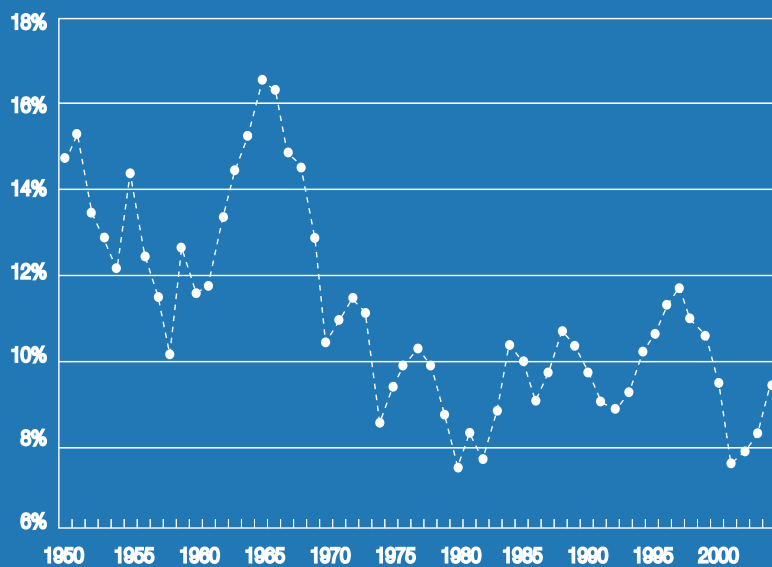
<그림>에서 보듯이, 2004년 현재 미국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금융 법인부문의 이윤율은 아직 1970년대 이후의 장기 저하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림>은 오히려 2004년 현재 미국 경제가 아직도 1970년대 이후 시작된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즉, 비금융 법인부문의 세금 공제 전 이윤율은 1950~60년대 ‘황금시대’ 동안 평균 13퍼센트의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1965년 16.6퍼센트를 피크로 저하하기 시작해 1980년 7.5퍼센트로 바닥을 친 후, 다시 완만히 상승해 1997년 11.7퍼센트까지 회복됐다. 하지만 이윤율은 그 후 다시 저하해 2001년에 7.6퍼센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001~2004년 회복과 함께 반등하여 2004년 9.4퍼센트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는 1965년 피크 대비 57퍼센트 수준, 전고점 1997년 대비 80퍼센트 수준에



정성진의 맑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장기 불황 속의 세계 경제 1973~2006



<그림> 미국의 비금융 법인부문 세금 공제 전 이윤율, 1950~2004

불과하다.

또, 1981~2004년 미국의 비금융 법인부문의 이윤율 평균치는 9.6퍼센트로서 1950~60년대의 13.3퍼센트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이윤율이 급락했던 1970년대의 9.8퍼센트보다도 낮았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이윤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구조적 위기 종식론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 준다.

2001년 이후의 이윤율 상승은 장기적 상승의 일부가 아니라 장기적 저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순환적 반등에 불과했으며, 이조차 2006년 말 불황이 임박하면서 다시 저하 국면으로 들어선 듯하다.

즉, 구조적 위기 종식론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21세기 세계 경제는 아직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을 초래한 근본 문제, 즉 세계 경제 전체 규모에서 과잉축적으로 인한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 상태를 타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6년 말 또는 2007년에 불황이 닥칠 경우 이는 지난 2001년 불황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우선, 대처할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 2001년 불황 때는 클린턴 시기 ‘균형예산’ 정책 등으로 조성된 재정흑자를 재원으로 정부지출을 증대시켜 불황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동안 부시의 이라크 전비 지출, 부유층 감세 등으로 재정적자가 2006년 중 무려 4천2백30억 달러(GDP 대비 3.3퍼센트 규모)로 누적될 전망이다어서, 정부지출의 추가 증대를 통해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또, 2001년 불황 때는 그린스펀이 2000~2004년 동안 연방기금 금리를 6.5퍼센트에서 1퍼센트까지 무려 17번이나 연속적으로 인하한 데서 보듯이 금리 인하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반면에, 2006년에는 유가 앙등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정책 운용의 여지가 거의 없다.

게다가 2001년 불황 이후 미국의 경기 회복은 거의 전적으로 소비지출 증가 덕분이다. 그러므로, 다음 불황이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서 시작된다면, 이로 인한 소비지출 급감이 거시경제에 미칠 위축 효과는 2001년 주식시장 거품 붕괴의 위축 효과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장기 불황

또, 2001년 불황은 닷컴 기업 주가 폭락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대미 수출 수요의 위축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다음 불황은 다른 나라들의 대미 수출 수요와 직결된 미국의 소비 위축에서 시발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미칠 위축 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

요컨대 2006년 세계 경제는 아직 1973년 이후 시작된 장기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난 2001년 불황 이후의 일시적 회복도 곧 사그라들 전망이다.

마르크스주의자의 임무는 자본주의가 내적인 적대적 모순으로 인해 불황과 위기를 겪는 것이 필연임을 인식하고 변혁적 반자본주의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지 뒤메닐과 패니치 등처럼 순환적 회복을 장기불황의 종식으로 착각하고 케인스주의·민족주의 대안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정성진 교수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맑스주의 경제학자이자 《마르크스와 한국경제》(책갈피)의 저자이고, 《마르크스의 사상》, 《소련 국가자본주의》 등의 역자이다.

에서 레바논까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좌초하고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미군의 압도적 군사력으로도 결코 저항을 잠재울 수 없었다.

그리고 국내의 반전 여론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8월 21일 CNN은 미국 내 이라크 전쟁 반대 여론이 61퍼센트로 개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그보다 전에 C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라크 전쟁 반대가 66퍼센트에 달했다.

우리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즉각·전면 철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이라크 점령 반대 투쟁을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테러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과 연결시켜야 한다.

이수현

상황을 악화시킬 뿐인 이라크 점령 중단하라

지난 5~7월 이라크에서 하루 평균 1백여 명씩 사망했다. 최근 유엔 보고서를 보면, 2003년 개전 이후 지금까지 이라크인 약 3백만 명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됐다.

그러나 부시 정부는 이런 폭력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8월 21일 기자회견에서 부시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미군이 결코 이라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군 해병대는 개전 후 처음으로 예비역 2천5백 명에게 강제 동원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군은 이라크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지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아니다.

오늘날 이라크에서 만연하는 불행과 비극의 발단은 2003년 3월 미군이 시작한 ‘충격과 공포’ 작전이다. 미군은 이라크인들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사회 기반시설을 무차별 폭격하고 파괴했다. 또, 팔루자와 나자프 등 저항세력의 근거지를 소탕한답시고 도시를 초토화하고 주민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그 뒤 미군은 아부그라이브 만행이나 하디타 학살 같은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들을 저질렀다. 8월 13일에도 미군은 바그다드 남부 검문소에서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 지지자들이 탄 차량을 공격해 16명 이상을 부상케 했다.

종파간 갈등과 충돌 문제에서도 미군은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선 작업에서부터 종파간 분열을 부추기는 등 시아파와 수니파, 쿠르드족을 분열지배하며 종파간 폭력 행위가 악화하도록 상황을 몰아갔다.

또, 후세인 정권 때 활개치던 암살단들이 여전히 평범한 이라크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미군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뒤를 봐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금 미국의 중동 지배 전략은 이라크

“의약품은 FTA 협상 대상이어선 안 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을 만나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FTA

의약품 관련 협상에 대해 들었다.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FTA 협상이 난항에 빠지는 듯했지만 결국 싱가포르에서 약값 문제를 두고 별도 협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협상의 내용과 영향은 무엇입니까?

이번 싱가포르 협상은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를 받아들이겠다면서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해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독립적인 이의 신청 기구를 만들어 줄 것, 미국 신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줄 것, 한국산 제네릭(복제 약) 약값을 많이 낮출 것,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양국 간 협의기구를 둘 것, 포지티브 리스트로 인해 미국 약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현재도 약값이 매년 14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가 관철 되면 앞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결국 건강보험료나 본인부담금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독립적 이의 신청 기구를 요구했고, 유시민 장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리 나라에서는 심사평가원과 공단이 효과는 좋으면서 비용은

저렴한지 등을 심사해서 보험약으로 인정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단이 약값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요구한 독립적인 이의 신청 기구의 성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심사에 문제가 있다면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재심을 하면 되는데, 결국 미국 제약회사들이 더 손쉽게 압력을 넣기 위한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통상 압력을 넣을 경우, 보험약 지정이나 약값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9월에 있을 3차 협상에서 특허와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있는 특허를 연장해 달라는 것이고 미국의 약이 한국에 처음 들어오면 독점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은 ‘강제실시’ 제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제실시’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약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가가 특허를 풀어서 약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는 이것을 많이 제한하고 있죠.

‘강제실시’를 제한하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밖에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이용하는 특허 연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제네릭의 출시가 늦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비싼 약을 사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약가 정책이 도입되면 건강보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대략 다른 나라에서 도입된 이런저런 제도들을 보면 [이를 통해] 특허가 보통 5년 정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가 5년 연장되면 현재 제도로 계산해도 매출액 상위 10개

약의 약값이 1천5백억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특허약과 제네릭의 차이가 커지는데, 이를 통해 4천5백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약 전체로 따진다면 약값이 1조 원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돈은 세금이나 의료보험비 등으로 메워져야 하고, 약을 살 때 본인부담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은?

의약품 제도라는 게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재정·의료 제도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FTA 의제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협상 의제로 올라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다른 부문에서도 그렇지만 FTA는 공공부문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고, 의약품 부문도 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FTA는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인터뷰 · 정리 강동훈



쌍용차 노동자 파업

기만적 합의를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하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집행부와 사측의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은 ‘정리해고 철회’를 빼면, 임금동결·복지삭감 등으로 점철돼 있다. 특히, ‘판매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용’은 상시적 정리해고와 다름없다.

집행부는 적당히 파업을 끝내려고 “합의안이 부결되면 경찰력이 투입되고, 정리해고 인원도 1천2백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협박까지 했다.

그러나 다수의 노동자들은 확실한 승리를 원했다. 조합원 다수가 속한 평택 공장에서 반대표가 가장 많이 나왔다. 선진적 현장 활동가들의 부결 선동도

한몫 했다.

집행부의 배신적 시도를 현장 노동자들이 좌절시킨 지금, 투쟁은 중요한 국면을 맞았다.

사측은 경찰력 투입을 요청했고, 파업 대오에 대한 식사 제공을 차단할 예정이다. 정리해고 인원을 애초 5백54명에서 더 늘리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그러나 강력한 점거파업을 계속 유지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금속연맹과 금속노조 그리고 민주노총의 진정한 연대 투쟁이 시급히 건설돼야 한다. 특히, 산별노조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종남